

# 인권 사각 교도소 요지경 '감빵생활'

판결문으로 본 수용자 관리 실태

### 재소자 간 성폭력 사건 빈발 서열 정해 몸종처럼 부리고 얼차려 등 폭력도 다반사 폐쇄적 공간 섬세한 관리 필요

재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같은 수용자들끼리 서열을 정해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고 얼차려까지 주는 행태가 교도소 내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문 속 교도소는 폭력·성폭력에 쉽게 노출된 공간일 뿐 아니라 교도관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소자 행위가 제한되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점이 여보인다.

◇성폭력 빈발하는 교도소=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지난 17일 준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백해남교도소에서 잠을 자던 옆자리 재소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이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건은 목포교도소에서도 발생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 준유사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다가 재소자에게 먹이려는가 하면, 재판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서열 정해 몸종처럼 부리는 교도소=광주교도소에서는 같은 방 수용자들을 몸종으로 지정해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얼차려까지 주는 등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의 피고인들은 광주교도소에서 동료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수감중 스스로 수용실 내 서열 1~3위로 정한 뒤 같은 방에 있던 40대 중후반 남성 3명을 몸종으로 지정해 '옷걸이에 옷 걸고 내리기', '수건 가져다주기', '이불 정리하기', '식기 설거지하기' 등을 대신하게 했다.

이들은 또 '정리정돈을 못한다'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며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어깨부터 발목까지 입직선이 되게 하거나 누워서 머리와 팔, 다리를 비스듬히 들게 하는 얼차려까지 줬다.

순천교도소의 경우 교도소측이 안구 건조, 충혈 등으로 개조해 사용했던 수면용 안대를 무단으로 폐기했다가 재소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한 바 있다. 광주지법 민사 1부는 C씨가 지난 2015년 6월, 순천교도소에서 안구 건조, 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해 허가를 받아 개조한 수면용 안대를 임의로 폐기했다며 낸 소송에서 C씨 측 손을 들어줬다. 안대는 형집행법(92조)에 따른 '금지물품'이 아니고 교도관 허가를 받아 개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으로, 폐기하더라도 처벌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감방 생활의 어려움=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2월, 준유사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아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요양서비스 위험수당 지급 촉구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광주지부가 2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광주일보 2월 22일 6면)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회사 주도 '어용 노조' 만들었다가... '딱 걸렸네'

### 대표 노조 삼아 교섭권 확보 목적 광주노동청, 제지회사 적발 부당노동행위 입직원 6명 송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제지회사를 적발, 검찰에 넘겼다.

회사의 협조적 노조를 결성, 대표 노조로 삼아 교섭권을 확보해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는 게 광주노동청 판단이다. 광주노동청이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대안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주와 소속 입직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노동청은 회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대양판지지회)의

영향력을 감소,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측이 주도해 노조(대양판지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해당 기업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를 취소시키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수노조인 경우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측에 도움이 되는 협조적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구성하면 향후 발생할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정의 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노동청은 보고 있다.

노동청도 회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가 광주노동청의 조사로 확인된 점을 들어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청은 "대양판지는 지난해 3월 회사 내 민주노총 급속노조 산하 노조가 만들어진 직후 사측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산하 대양판지노조를 설립, 노사 관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측

이 임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연차 사용권, 초과 작업 부여 등을 활용했다는 게 민주노총측 주장으로, 회사측이 설립한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확보하면서 후퇴한 단체협약 체계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급속노조는 지난해 4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검찰에 넘기는 것과 별개로 해당 노조 설립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대양판지 관계자는 "현재 복수노조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노동청이 설립총회 미개최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노조 설립을 직권 취소하기로 통보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당 회사대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은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주행 중 담배 피우려고 라이터 켜자 차량 "핑"

### 운전자 화상... 생명엔 지장 없어

주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다. 22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양동복개사가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수입SUV가 폭발, 운전자 A(37)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 중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차량 뒷자리에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휴대용 부탄가스 10여개가 있었던 점, 운행 중 폭발이 차량 뒷자리에서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양동복개사가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수입SUV가 폭발해 운전자 A(37)씨가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부소방 제공>

## "일본 '다케시마의 날' 즉각 철폐하라"

### 광주 시민단체, 서명운동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006년부터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2월 22일) 행사를 열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22일 '(사)독도사랑광주포럼'과 '(재)독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구 우산공원 인근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 및 독도수호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말바우시장 장날을 맞아 500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단체들은 이날 행사에서 "시내마련의 조례와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철폐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제국주의 부활 망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